

03

환경 · 기상 · 국토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 수질관리과 (☎ 044-201-7066)

■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입지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납, 카드뮴 등의 특정물질을 먹는물 기준치보다 낮게 방류하는 경우에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지역에서는 입지를 아예 원천금지하였으나,

*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그 상류지역

- 앞으로는 먹는물 기준치 미만으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하고 그 이상만을 배출하는 시설만 입지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먹는물 수준으로 합리화 입법예고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추진배경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주요내용
 -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설치제한지역 내 입지를 제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먹는물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시행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14.11.24)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 6개('15. 1월 말)

안전한 어린이용품 선택을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0)

■ 환경부는 ‘유해물질 없는 어린이용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시행(’15.1.1)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어야 할 환경유해인자를 지정하여 준수여부를 사후적으로 단속하였으나,

- 2015년 1월1일부터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4종)*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한 경우 해당 기업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 동 제도로 국민의 어린이용품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할 수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어린이 활동공간·용품 유해물질 사전에 관리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로 국민의 선택권 및 알권리 보장

■ 주요내용

- ① 어린이용품 내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 표시
- ②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벌칙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77)

■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대한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과도한 정화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계획입니다.

- 기존 토양법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한 오염발생의 경우에만 정화책임이 면책되었으나, 2015년 3월 25일 개정 토양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면 토양법 시행일('96.1.6) 이전 토지를 양수받은 자는 정화책임을 면책받게 되는 등 면책범위가 확대됩니다.
- 또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정화책임자는 국가에 대하여 정화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수의 정화책임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설치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화책임 우선순위 : ①토양오염 직접원인자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유·운영자 ③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소유자 ④토양오염 발생토지 현재 소유·점유자 ⑤토양오염 발생토지 과거 소유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합리성 강화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의 합리성 강화

■ 추진배경 : 정화책임 면책범위 확대 및 일정요건하 국가의 비용지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토양오염 정화책임체계 구축

■ 주요내용

- ① 오염토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면제
 - '96.1.6 토양법 시행 이전 양도 등의 사유로 해당토지를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 토양법 시행이전 토지를 양수한 경우
- ② 과도한 정화비용 발생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오염유발자 또는 시설의 소유·점유·운영자 : 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시설의 소유·점유·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초과
 - '02년 이전 토지양수자 :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02년 이후 토지양수자 : 정화비용이 해당 토지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③ 환경부에 설치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토양환경분야의 전문가(10년 이상 종사자, 교수, 변호사, 관계공무원 등)로 구성

■ 시행일 : 2015년 3월 25일(법제처 심사 중)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환경부 유역총량과 (☎ 044-201-7021)

- 고농도·난분해성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 기존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농협조합도** 할 수 있게하여, 축산·경종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앞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이 부과되며, 기존의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3~5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 가축분뇨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축사인근 토지**에 **출입**하여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준이 모호한 채 방치되던 가축분뇨 **퇴비**와 **액비(액체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지속가능한 축산발전, 환경-농식품부간 3년 논의 결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추진배경 : 생활악취와 수질 오염부하량이 큰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이 기여
- 주요내용
 -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주체 확대, 불법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실태조사 실시,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15년 3월 25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250원→300원)

환경부 자연정책과 (☎ 044-201-7224)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2001년 도입 당시의 부과단가(단위면적당 250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가 있는 바,
 -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 단위면적당 300원으로 상향조정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 조정

- 추진배경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01년 도입 당시의 부과단가(단위면적당 250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생태계의 훼손을 막기 위한 유인수단으로 한계
- 주요내용
 - ① 개발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단가를 250원/㎡→300원/㎡로 소폭 상향조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2)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저감’을 위해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는 인체 위해성이 크고 오존(O₃)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해 건축, 자동차보수, 도로표지판 등에 사용되는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 2015년 1월 1일부터는 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를 공급·판매하는 자에게도 함유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기존에 설정한 함유기준도 최대 50%까지 강화·시행하게 됩니다.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인체 위해성이 크고 오존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량 저감을 위해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
- 주요내용
 - ① 선박용, 철구조물(강교)용 도료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설정
 - ② 건축용·자동차보수용·도로표지판용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최대 50%까지 강화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11)

■ 환경부는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일러, 도장시설, 탄화시설 등을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간당 증발량이 2ton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이상인 보일러

** 용적이 5㎡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은 모두 해당되며, 특히 도장작업 전 페인트를 벗겨내는 자동차 정비업의 샌딩시설도 포함

- 또한,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용적 30㎡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150㎡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주거지역에 인접한 대기배출 오염원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 사용 보일러, 도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②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 02-6943-1305)

-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14.12월)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 반대로, 각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 및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기대합니다.
 -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 비용효과적이며, 감축 수단의 유연성을 제고합니다.
 - 우리나라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및 저탄소산업 육성에 기여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정책이슈>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게시판

배출권거래제 시행

- 추진배경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대비 30%감축)의 비용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결정
- 주요내용
 - ① 할당된 배출권의 범위 내에서만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여분 또는 부족 배출권을 다른 사업장과 거래
 - ③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용효과적 달성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 보고·등록·신고 등의 의무 이행 필요

환경부 화학물질과 (☎ 044-201-6771)

■ “No Data, No Market(화학물질의 정보 없이는 시장출시 없다)” 원칙에 기반하여 화학물질·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보고·등록 및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등이 도입됩니다.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양·용도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최초 보고는 '16.6.30일까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제조·수입 불가, 판매중지 가능,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은 3년마다 고시('15년 상반기중 최초 고시 예정)되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 전**(총량 연간 1톤 초과 확인시) **또는 다음해 4월30일**(총량 확인 곤란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품목별로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는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려면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15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 +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3종)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12월중 예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 인체·환경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함유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 주요내용

- ① 보고제도 신설(모든 신규화학물질, 1톤/년 이상 기존화학물질 양·용도 현황 보고)
- ② 등록대상 확대(0.1톤/년 신규화학물질 → 모든 신규화학물질, 1톤/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 ③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양도시)
- ④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신설(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 1톤/년 초과)
- ⑤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신설('15년 상반기 내 고시 예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34)

- 환경부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15. 1. 1)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유독물은 지자체, 취급제한물질 및 수입화학물질은 지방환경관서에서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합니다.
 - 또한, 사전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던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그간 공무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던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 사고의 우려가 큰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 사회에 고지**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화학물질 사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사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알림/홍보>보도·해명>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 추진배경 : 화학물질 유통·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 주요내용
 - ① 화학물질관리체계 일원화(지자체, 지방환경관서→지방환경관서)
 - ② 취급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 도입
 - ③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는 전문기관이 수행
 - ④ 사고대비를 위한 위해관리계획 제도 시행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7)

-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소비자가 2015.1.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중 CO₂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되며,
 -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으시면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연료비도 약 3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구매보조금은 한국환경공단의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hybridbonus.or.kr)”으로 신청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헬프데스크 1661-097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인 친환경차의 기술향상과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환경부,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 시행’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20년 BAU 대비 34.3%인 34백만톤) 및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15년부터 친환경차(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지급대상) CO₂ 배출량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한 구매자('15.1.1일 출고분부터)

* 출고일은 「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상의 양도 연월일을 말함

② (지원금액) 대당 100만원 국고보조금 지급

③ (신청)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한 이후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방문, 우편 신청 가능)

* 첨부서류 : 자동차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구매자 본의명의 통장 사본(법인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도모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50)

■ 규제완화·개선 및 창조경제 실현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을 개정('14.11.19 시행)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주요개정내용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등록 인력기준인 상근 기상인력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기상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하여 그동안 기상장비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었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상예보 및 기상서비스 지원이 다양해집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소관법령>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 개정사유 : 기상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기상서비스 분야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기상사업 등록기준 완화

-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상근 기상인력기준 축소(기존 2명 → 1명)

■ 시행일 : 2014년 11월 19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기상청 슈퍼컴퓨터운영과 (☎ 043-711-0230)

- 급변하는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수치예측모델 해상도 향상에 필요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우리)이 2015년 5월부터 정식 가동하게 됩니다.
 - 슈퍼컴퓨터(우리)에서 가동할 수치예측모델을 2015년 1월에 설치 후, 5월부터 현재 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 수치예측모델(25km→17km)의 시험운영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2016년 슈퍼컴퓨터(4호기) 최종분 가동으로 위험기상의 사전 대응능력과 강수 정량예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2016년부터 수평분해능 17km의 전 지구 수치예보모델 운영과 호우특보 선행시간 향상에 필요한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우리 : 대국민 공모를 거쳐 당선된 슈퍼컴퓨터 4호기(초기분) 명칭

☞ (참고) 기상청부 홈페이지>행정과정책>보도자료>기상용 슈퍼컴퓨터(4호기) 낙찰예정사 선정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 확대

기상청 해양기상과 (☎ 02-2181-0742)

- 하계 휴가철 해수욕객들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안류(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으로, 빠른 속도(초속 2~3m/s)로 피서객을 휩쓸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

- 2011년부터 기상청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이안류의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제주 중문과 양양 낙산을 추가하여 총 3군데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정보를 86회 제공함으로써 유관기관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안류 발생건수가 2009~2014년까지 67건이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 2015년부터는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도 이안류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날씨영상>일기도>해상예상일기도>해양지수정보>이안류 예측정보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 정책>보도자료>해운대 해수욕장, 이번 여름 이안류 걱정 뚫!
(2011.7)

2015년도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제공 해수욕장 확대

- 추진배경 : 해수욕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지역 추가
- 주요내용
 - ① 이안류 예측 해수욕장 확대(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 시행일 : 2015년 6월(잠정)

지진통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기상청 지진정책과 (☎ 02-2181-0768)

- 예측 불가능한 지진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청은 2015년부터 지진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지진속보는 120초이내, 지진통보는 300초이내에 발표되어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진속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지진조기경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2015년 1월에는 지진재난대응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먼저 시행하고,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국민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20년까지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을 10초 이내로 단계적으로 단축시키고, 자동자막방송, 재난기관 재해대응시스템 연계를 통한 재난대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진조기경보서비스는 지진재해 경감과 대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지진관측법 제정공포

지진조기경보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 지진 발생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진정보 제공 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필요
- 주요내용
 - ① 지진조기경보 통보(현재 지진속보 120초 → 지진조기경보 50초)
 - ② 지진조기경보 재난기관 직접 전파 시행
-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예보 기간 연장

기상청 예보정책과 (☎ 02-2181-0510)

- 기상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 연장을 통해 이음새 없는 날씨예보를 제공합니다.
- 단시간에 발생했다 소멸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1시간 단위로 최대 3시간 후까지의 날씨예보를 1시간마다 초단기예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초단기예보의 제공기간을 최대 4시간까지 연장하고,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 할 계획입니다.
- 전국 읍·면·동 단위로 12가지 기상요소에 대한 예측정보로 국민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단기(동네)예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날씨를 3시간 단위로, 3시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15년부터는 국민들이 상세한 모레까지의 날씨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보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특보·예보>동네예보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 추진배경 : 예보기간 연장으로 이음새 없는 날씨예보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편의 제고 및 신속한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 ① 초단기예보를 기존 3시간에서 4시간까지 연장하여 발표
 - ② 단기예보 예보기간을 기존 오늘~내일에서 오늘~모레까지 연장하여 발표
- 시행일 : 2015년 3월(2014년 3월부터 대국민 시범서비스 중)*
 - ※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 중



총자외선 지수 대국민 서비스 실시

기후변화감시센터 (☎ 041-674-6420)

■ 최근 피부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에 따라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총자외선 지수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백내장, 피부암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의 자외선 지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A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개발하였고,

- 2015년부터는 WMO/WHO* 자외선지수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외선A와 B를 합산한 총자외선 지수**를 국민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 세계기상기구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보건기구

- 또한, 2015년 8월에는 태양의 비타민D 생성과 자외선 유해정도, 노출시간 등을 지수로 환산하여 제공하는 **건강자외선지수**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경로)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 >
기후변화감시 > 자외선지수(예정)

2015년도 총자외선 지수 제공 서비스

- 추진배경 : 최근 피부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가
- 주요내용
 - ① 총자외선지수 대국민 서비스(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
- 시행일 : 2015년 3월(잠정)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팀 (☎ 02-2181-0895)

■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상청은 2011년 서울시 독거노인 대상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14년에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취약계층 관리자(독거노인생활관리사, 국·공립어린이집원장, 장애인시설관리자)에게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6~9월)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12~3월)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오늘과 내일 지수별 최고 예상값이 발송기준 도달시 문자 발송(일 1회/ 08시)

- 수도권지역에 제공되던 생활기상정보 서비스를 20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전국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현재 취약계층과 직접 교류하는 관리자를 통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전달 방법 다양화, 수혜 대상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소외계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 추진배경 :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건강보호 위해 생활기상정보 제공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전국 확대
 - ('13) 서울시 약 1,500명 → ('14) 인천, 경기지역 약 3,100명 → ('15) 전국

■ 시행일 : 2015년 6월

기후변화 원인물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

기후과학국 기후변화감시센터 (☎ 042-674-6420)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이산화탄소의 일평균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농도는 월평균과 연평균 농도로 ‘지구대기감시보고서’에서 연 1회 제공되었습니다.
- 2015년 2월부터 한반도의 서쪽(안면도) 이산화탄소의 일평균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 또한, 10월부터는 남쪽(제주고산)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확대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한반도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료경로)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mate.go.kr) >
기후변화감시(예정)

2015년도 이산화탄소 실시간 농도 제공

- 추진배경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이해 향상 및 정보 제공
- 주요내용
 - ① 이산화탄소 농도 실시간 웹페이지 제공(연1회 월, 연평균 → 매일 일평균)
 - ② 이산화탄소 농도 대국민 서비스 확대(한반도 서쪽, 남쪽 관측망)
- 시행일 : 2015년 2월(잠정)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7)

■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합니다.

-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의 역할에 더하여 달라지는 주택도시기금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개편으로 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주택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추진배경 : 국민주택기금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 주요내용
 - 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② 도시재생사업에 재정 보조 뿐 아니라, 기금의 금융지원 가능
 - ③ 전문성 있는 기금 전담 운영기관 지정
- 시행일 : 2015.07.01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5.1.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합니다.

- 본 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 수록 우대)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의 저금리로 이용가능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표】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7 (1.7)	2.8 (1.8)	2.9 (1.9)
2천 초과~4천만원 이하	2.9 (1.9)	3.0 (2.0)	3.1 (2.1)
4천 초과~5천만원 이하	3.1	3.2	3.3

☞ ()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 특히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가 소득(최저생계비 2배 이내), 부동산, 자동차 소유 등을 엄격히 따져 추천하던 2.0% 금리의 기존 저소득가구 추천 제도는 폐지

- 이번 조치로 지역별 대출한도도 상향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전세자금 대출계층에 주거 상향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통합 전세대출상품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추진배경 :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년 1. 2일부터 전격 시행

■ 주요내용

- ① 기존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는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통합
- ② 금리를 2.7~3.3%으로 보증금별, 소득별 차등화하여 저소득층 우대
-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 우대금리

■ 시행일 : 2015.01.02

■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포털 또는 기금취급 6개 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12.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5)

■ 정부는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5.1.2일부터 최초로 실시합니다.

- (대상)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I,II) 가입자, ③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 허용
- (대출조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고액월세자 제외 : 보증금 1억원,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

■ 정부는 이번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500억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제도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월세대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4.12.22부터 **우리은행**에서 사전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주택기금포털 www.nhf.molit.go.kr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의 확산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심해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15년 한시로 주택기금 월세대출을 시범 실시
- 주요내용
 - 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월세대출 상품 출시
 - ② 2.0% 저금리로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I,II)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대상
 - ③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시행일 : 2015.01.02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이 '15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 현 주택시장은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해소되면서 지역별로 수급상황이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부족기에 도입된 전국적·획일적 청약규제로 국민 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 청약제도는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개편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9·1부동산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

■ 주요내용

〈'15. 3월 이전 시행예정〉

-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5. 7.1 시행예정〉

- ⑥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주택법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추진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51)

■ 파독(派獨)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15년 3월 중 시행됩니다.

- 60~70년대 파독근로자(간호사·광부)가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고,
 - 사망·중증장애로 생활이 불안정하기 쉬운 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의 경우에도 주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파독 간호사·광부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 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5년간 한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파독(派獨) 근로자등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 추진배경 : 파독(派獨) 근로자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 시행일 : 2015. 3월 시행예정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등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될 예정입니다.
 -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됩니다.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됩니다.
 -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이 완화**(4층→5층) 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완화

- **추진배경**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 ②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
 - ③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 완화
 - **시행일** : 2014년 3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 ※ 다만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7월까지 개정 예정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 주거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대상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 4인가구 기준 월 173만원

- 수급대상 가구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내년 6월 또는 7월 본격 시행

2015년도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 주요내용

- ① 수급대상 확대 : 70만(14년) → 97만 가구(15년)
- ② 월평균 급여액 증가 : 9만(14년) → 11만원(15년)

■ 시행일 : 2015년 6월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044-201-3459)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을 조정합니다.

-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사업범위 등에 관한 규정도 종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대한지적공사의 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 조정

- 추진배경 :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지적공사의 공적역할을 확대하고 공적기관으로의 위상변화에 맞게 명칭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전환하고 기능을 개편 필요
- 주요내용 :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을 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조정
- 시행일 : 2015. 6. 4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 044-201-3473)

- '15.6.4부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동안 사전에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공간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국민, 학계 및 연구기관 등도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 공간정보의 검색, 구매(유료정보의 경우), 내려받기(Download)는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www.nsic.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국가공간정보 제공대상 범위확대

- 추진배경 : 국가공간정보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 주요내용
 - ① 공간정보 제공대상을 '공간정보사업자'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로 확대(공간정보 산업 진흥법 개정)
 - ② 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 시행일 : 2015년 6월 4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6)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할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고
 -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천만원 한도)으로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이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소상공인 휴업보상액, 현재보다 약60% 증가한다

2015년도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추진배경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확대 필요
- 주요내용
 -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 휴업보상분의 20%(1천만원 상한)
 -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 5백만 원 → 6백만 원
- 시행일 : 2014년 10월 22일(최초로 보상계획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보상전문기관 확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6)

-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2015년도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추진배경 :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한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보상전문기관 확대 : 현행 8개(LH공사 등) → 21개(부산도시공사 등 13개 추가)
- 시행일 : 2014년 12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3)

■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됩니다.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금액	요율	금액	요율	
매매	6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이하	
			9억원 이상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0.8%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이하	
			6억원 이상	0.8%이내 협의	

-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됩니다.

구분	현행 요율	변경요율		비고
	오피스텔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그 외 오피스텔	
매매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0.5%이하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임대차		0.4%이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개선

- 추진배경 : 고가주택 중개보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 확산
- 주요내용
 - ①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요율 신설
 - ②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신설
- 시행일
 - ① 주택의 중개보수는 각 시·도별 조례 개정 중(잠정 '15.2~6월 공포 예정)
 - ②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중(잠정 '14.12월~'15.1월 공포 예정)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5)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증대되고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임

-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 구체화,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확대 (7개→14개),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등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 공포 시행('14.12월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2015년도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 부담완화

■ 추진배경 :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이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

■ 주요내용

- ①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등 타 부담금 비용인정 확대 (7→14개),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 준공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기술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일부 건설관련 업체에서는 인력정보 부족으로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협회별*로 분산된 기술인력정보를 하나로 모은 기술자 경력 디비(DB)**와 건설관련 업체의 구인정보를 연계한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내에 구축하였습니다.

* 경력관리기관(6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경력 디비(DB):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89년부터 건설기술자(약70만 명)의 경력, 학력, 자격, 근무처 등을 신고받아 관리중인 자료로 약2억 개 정보 축적

■ 기존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건설관련 단체에서는 독자적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건설관련업체 정보와 건설기술자의 경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으나,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건설워크넷)는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 디비(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디비(DB)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구인·구직정보 한곳에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설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 개소

- 추진배경 : 건설경기 침체로 기술인력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에서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구인난이 발생.
구인·구직 매칭지원을 통하여 정보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설기술인력 수급 불균형과 기술자 경력단절 및 실업 등을 해소
- 주요내용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보유한 건설기술자의 정보(약 2억개)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시행일 : 2014년 11월 28일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7)

-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물(D,E급)의 정기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시설물의 등급에 상관없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던 정기점검의 주기를 취약시설물(D,E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중급기술자) 특정분야에 대해 ‘기사’ 자격으로 제한을 둔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중 불필요한 장비보유기준(비디오카메라)을 삭제하여 신규 진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시설물 점검주기 확대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완화

- 추진배경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불필요한 진입규제 완화
- 주요내용
 - ① 취약시설물(D,E급) 정기점검 시기 변경(반기 1회 이상→1년 3회 이상)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중급기술자 중 ‘기사’ 자격 삭제)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비디오카메라’ 삭제)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의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용·복합개발 촉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08)

-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됩니다.
 -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지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사항을 완화합니다.
 -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참고자료>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 내 용·복합 개발 가능해진다.

2015년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의 용·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공간 조성, 노후화된 기성시가지 정비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지정대상) 도시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노후·쇠퇴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공업지역 등
 - ② (지정기준)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등
 - ③ (완화내용)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 ④ (지정절차)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안) 입안 →국토부에 결정 신청 → 관계기관협의 → 중도위심의 → 국토부결정('18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 시행일 : 2015년 1월(잠정, 12.9 국회 본회의 통과)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기반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현재 기반시설에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 할 수 있어 주민들이 한 시설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 이를 개선하고자 하나의 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판매 등 다양한 기능의 시설을 편익시설로 복합설치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14.12월부터 규칙이 개정되어 기반 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시설 활성화
- 주요내용
 -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확대
- 시행일 : 2014년 12월(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마련)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56)

■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분양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됩니다

-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미분양 면적에 관계없이 추가 공개모집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표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이 아파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과 같이 중심선치수*에서 안목치수**로 일원화됩니다

*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건물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도 분양건축물 제도 개선사항

■ 추진배경 :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 주요내용

- ①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20호실이상→30호실 이상)
- ②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 완화(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 최초 공개모집후 수의계약 가능)
- ③ 오피스텔 분양계약서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중심선치수→ 안목치수)

■ 시행일 : 2014년 12월 3일 시행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우수건축자산을 적극 보전·활용함과 동시에 새롭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적 유산으로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많은 건축자산들이 경제논리 등으로 인해 훼손·멸실되어 왔습니다.
 - 앞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시 건축법·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의 완화 적용 등을 통해 적극 보전·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밖에 한옥과 관련 하여는 여러 지원책과 더불어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특례적용 기준을 수립하여 한옥을 보다 쉽게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는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거쳐 특례적용 등의 세부 지원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확정해 오는 6월 동법령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

한옥등건축자산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자산 진흥을 통한 국가건축문화 진흥
- 주요내용
 -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관계법령의 특례적용
 - ③ 한옥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시행일 : 2015.6.5(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중 '14.12.26~)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3)

-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수리용 부품으로 순정품(OEM부품)을 대부분 사용하여 수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 2015년 1월 8일부터는 보다 저렴한 대체부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을 통해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대체부품 인증제도

- 추진배경 :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14.1)
- 주요내용
 - ①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대체부품에 대해 성능·품질 인증
 -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하여 판매
- 시행일 : 2015년 1월 8일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8)

■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 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물 의무보험**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이번 보상한도 인상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1일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10년만에 1.5배 확대

2016년도 책임보험 및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개요

■ 추진배경 : 보상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①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사망·후유장애시 1억원→1억5천만원, 부상시 2천만원→3천만원)
- ② 대물유무보험 보상한도 인상(1천만원→2천만원)

■ 시행일 : 2016년 4월

■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15. 1. 8부터 의무화** 됩니다.
-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가 정하여 공개한 표준정비시간을 인쇄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주요 정비항목에 대하여는 게시물을 붙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정비의뢰자가 정비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작업시간과 실제정비시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정비요금의 과다청구를 막고 정비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으로 제작사, 차종, 정비도구, 사용연료 등에 따라 실제정비시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정비의뢰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의 시간당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

- 추진배경 :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도록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요금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자동차 정비업자는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
 - ② 주요정비작업 외에는 홈페이지 게시 및 인쇄물을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
- 시행일 : '15.1.8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운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6)

■ 인천공항에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 2곳)**를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 인천공항의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는 '14.10.18부터 1단계로 일부 제한적 운영* 중이며 '15년 1/4분기 중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항여객터미널 동쪽 Fast Track, 오전8시~10시

- 전용출국통로 이용으로 출국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 **교통약자의 권익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 사회적 기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시범운영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 추진배경 : **교통약자·사회적 기여자** 등에 대한 공항이용 편의 증진

■ 이용대상

- ① (교통약자) 만6세 이하, 만80세 이상, 임산부, 보행 장애인 등
- ② (사회적 기여자)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자

■ 시행일 : 2015년 1/4분기(잠정, 관련기관 인력 증원을 위한 절차 진행중)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비행중인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건물이나 굴뚝, 철탑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공안전을 위하여 60m 이상 구조물중 특수구조물(철탑, 굴뚝 등)에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를 '15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는 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설치신서를 제출할 수 있게됩니다.

* 지역별 관할 지방항공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 서울지방항공청
- 경상, 전남, 제주, 울릉도(독도) :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 추진배경 :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신고자의 불편 제거

■ 주요내용

- ①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매우 중요한 시설중 하나인 항공등화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어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15년 1월 1일부터는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조건 완화 시행

■ 추진배경 : 공항운영자의 유지보수인력 운용효율 증대

■ 주요내용

- ① 항공등화시설 유지보수를 자격조건을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에서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 실무경력으로 완화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 자는 표시등 설치신고 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광도 및 광학 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섬광등의 경우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성능시험 성적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15년 1월 1일부터는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험성적기관의 표시등 시험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15.1.1부터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 시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 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섬광등의 경우에 대하여는 시험검사기관이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기관의 자격 구체화 시행

■ 추진배경 : 항공장애 표시등 시험성적서의 신뢰도 향상

■ 주요내용

- ①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제출하는 성능시험성적서에 대하여, 광도 및 광학측정분야 또는 조명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섬광등에 대하여는 섬광등을 시험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도로변 규제 푸니 '여의도 18배' 땅이 이용 가능!”
접도구역 폭 축소(20→10m), 지정제외 확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0)

- 고속도로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소유한 토지가 도로변 관련 규제(접도구역)에 묶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군도)변에 거주하는 B씨는 사는 집을 넓히려 했지만 역시나 관련 규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접도구역 완화로 이 같은 국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일정폭(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을 지정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같은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서 도로변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도구역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접도구역 지정목적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도로변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 ②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③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④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 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시행일

- ① 2014년 12월(법령개정)
- ② 2015년 6월[접도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국도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3),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1361)

-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 수단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불꽃신호기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판매목적이 아닌 직접 사용 목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져 보급에 애로가 있었는데
 - 경찰청에서는 하이숍에서 양도·양수 허가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먼저 시행하고, 자동차판매업소, 부품업소, 정비업소 등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 이에 따라, '15.1월말부터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긴급용 불꽃신호기 보급 활성화

- 추진배경 : 불꽃신호기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나, 양도·양수 시 판매목적으로는 허가가 어려워 보급에 애로

■ 주요내용

- ① 경찰청 지침을 변경하여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14.10)하고, 하이숍에서 판매 추진('15.1월말)
- ② 하이숍 외에 자동차정비업소 등에서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행일

- ① 2015년 1월(고속도로 하이숍에서 판매 추진)
- ② 2015년 10월(잠정, 개정안('14.10.31 입법발의) 국회심의중)*

*'14.10.31 입법발의(김성태 의원)하여 국회 계류 중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400원 내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898)

- 서수원~평택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그간 문제로제기되어 왔던 MRG(최소운영 수입보장)를 폐지합니다.
 -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동탄~북평택, 25.4km) 통행 시 3,1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였으나, 정부와 운영자의 협약 변경을 통하여 2,7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경우 통행료 400원 인하로 연간 약 19만원의 가계 부담 감소 예정
 -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행료 인상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인상폭도 최대 7.37%(연평균 2.4%)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향후 25년간('15~'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9,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MRG를 폐지하여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을 완전 제거하고, 기존의 재정지원 소요액 미지급에 따라 5.2억원 재정 절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도로과 (☎ 044-201-3902)

-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 중 (‘2504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

-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이용

-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참고1)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모든 도로에서 발생한 불편사항(포장파손, 낙하물, 긴급견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

-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으로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처하면 된다.